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요약

Ⅰ.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배경 / 1

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주요 내용 / 3

3	1. 미국
8	2. EU
18	3. 독일
22	4. 영국
26	5. 중국
31	6. 인도

Ⅲ. 결론 및 시사점 / 36

요 약

□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배경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운송 등 녹색 분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 추구

□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주요 내용

- (미국) 작년 대선에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변화 예상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경제 및 탄소 순 배출량 0(Net Zero)을 목표
 - '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7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및 그린시티
- (EU) EU 집행위원회는 '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19.12월)
 - EU 집행위는 '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최소 55%로 상향, 재생 에너지 이용 비중을 32%에서 33.7%로 증가하도록 목표 조정
 - 정책 이행을 위해 EU 집행위는 1조 유로 이상의 유럽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수립
 - 중점 추진분야는 그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청정 및 순환 경제
- (독일) EU 내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으로 EU의 유럽그린딜 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핵심 국가.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30 기후행동 프로그램(Climate Action Program 2030) 채택('19.9월)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60억 유로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계획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영국)**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최대 25만 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 계획(10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발표('20.11월)
 -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년까지 '90년 대비 68%로 제시하고, '50년까지 12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지지하였으나, 최근 탄소중립을 '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 발표('20.9월)
 - 여타국 탈탄소 그린뉴딜 정책과 달리 중국은 新인프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도시 재생 및 스마트시티
- **(인도)** 미국, 중국에 이은 제3위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아직 그린뉴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모디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까지 '05년 대비 33~35%로 설정, 모디 총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인도의 기후 행동계획을 발표('19.9월)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 결론 및 시사점

-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위해 각국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도입,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 친화적 혁신 기술개발 등에 박차
- 각국이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은 규제로서의 위기요인과 새로운 사업기회가 공존하며 우리의 경쟁력에 기반한 진출방안을 모색
 - **(위기요인)**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EU의 탄소국경세와 녹색공공조달제도(GPP), 녹색 무역기술장벽(TBT) 등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강화 및 확산
 - **(기회요인)** 기후변화 시장규모는 '30년 26조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그린 빌딩, 전기차, 교통 인프라, 폐기물 관리, 하수 처리, 재생에너지 등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관련 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 마련

I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배경

□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응

- 자원고갈과 환경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1℃ 상승했으며 이대로라면 '30년 상승 폭은 1.5℃에 이를 전망.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지구 온도는 금세기 말까지 2.7℃까지 상승 가능(UN Emission Gap Report 2019, 2019)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도시,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0을 달성해야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IPCC Global Warming of 1.5℃, 2018)

-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

□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경제의 위기극복의 일환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각국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 중

* IMF는 '20년 세계 경제성장을 -4.4% 로 전망. 국별로는 미국 -5.8%, EU -8.3%, 영국 -9.8%, 중국 1.9% 등

- 청정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개조 등 녹색투자를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지구 온도가 상승할수록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도 심각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돌입

- 산업, 운송,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
 - 청정에너지,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투자할 경우 보다 많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가능

□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 또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

* 탄소중립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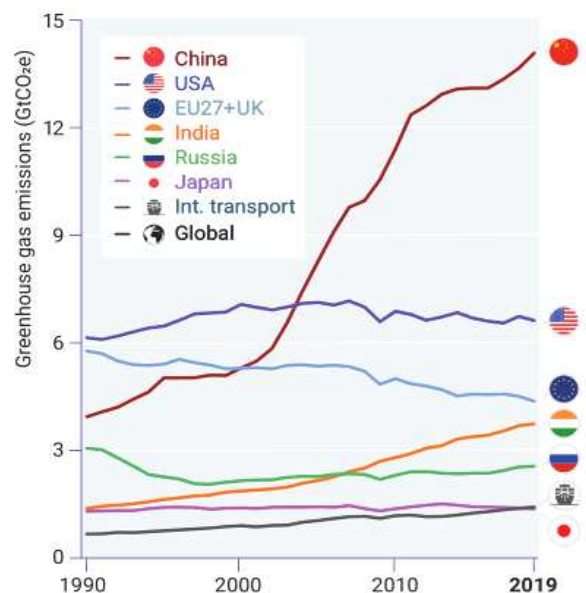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각국의 방식은 상이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 그린뉴딜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지속가능한 운송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제고 △스마트시티 구축 등

- 탄소배출 상위국 중 주요국(미국, EU, 독일, 영국, 중국, 인도)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 파악

<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순 위	국가	CO ₂ 배출량 (백만 톤)	전 세계 비중 (%)	1인당 CO ₂ 배출량 (톤)
1	중국	9,839	27.2	7.1
2	미국	5,269	14.6	16.2
3	인도	2,467	6.8	1.8
4	러시아	1,693	4.7	11.8
5	일본	1,205	3.3	9.5
6	독일	799	2.2	9.7
7	이란	672	1.9	8.3
8	사우디아라비아	635	1.8	19.3
9	한국	616	1.7	12.1
10	캐나다	573	1.6	15.6
-	전 세계	36,153	100	-



* 자료원 : Global Carbon Atlas(2017), UN Emission Gap Report 2020(2020)

II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주요 내용

1

미국

가. 현황

-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이자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편으로 과거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
 - 미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는 적은 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국민의 에너지 소비량은 타국가에 비해 많은 편
 - * 미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6.2톤으로 중국(7.1톤), 인도(1.8톤)에 비해 높은 편('17년)
 -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연방정부 보다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 및 산업계 주도로 추진되어 왔음.
 - * 뉴욕주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보호법(The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제정('19.6월)
-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석유 등 전통 에너지산업을 옹호함에 따라 EU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
 -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이 미국에게 불공평하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동 협정을 탈퇴('20.4월)
 -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및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 미국에서 그린뉴딜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
 - '19년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 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의 반대로 부결
 - * 그린뉴딜 정책 수립을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 인식(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결의안은 '30년까지 전기에너지를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을 목표로 제시

-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
 - 녹색일자리(Green Job),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녹색산업(Green Industry)을 통한 환경보호, 실업률, 경제문제 극복이 목적

□ 청정에너지 혁명과 환경정의 계획(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으로 저탄소·친환경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 및 탄소 순 배출량 0(Net Zero)을 목표로 '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7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

나. 중점 추진분야

① 친환경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공제,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정책 등 추진
-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지원) 연방정부는 '09.12.31일 이후 생산된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00~7,500 달러의 세금 감면,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책 제공
- (무공해자동차 의무 판매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9개 주정부*는 '25년 33만 대, '30년 1,200만 대 무공해자동차(ZEV, Zero Emission Vehicle) 보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Multi-State ZEV Action Plan) 발표
 -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
 - 캘리포니아주는 '30년까지 5백만 대의 무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향후 5년간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7.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수소차 보급 활성화) 미국 내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자동차 제조사, 수소에너지 공급사, 연료전지 개발사 등이 협력하여 민관협의체(H2USA) 설립
 -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는 예산지원법안 (AB8)을 마련하여 '23년까지 100개 수소차 충전소 구축 및 5만 대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설정

②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

-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력 수요에서 풍력의 비중을 '30년 20%, '50년 35%로 확대할 계획
 - * 美 전력 생산 비중('19년) : 천연가스(38.4%), 석탄(23.4%), 원자력(19.6%), 재생에너지(17.6%)
-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장려
 -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첫 10년간 1MWh 당 3.5센트 보조금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의 30%를 세액에서 공제
- 주별로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계획 전개
 - 캘리포니아주는 '45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발표
 - 미시간주는 청정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
 - 워싱턴주는 현재의 전력 발전의 70% 이상을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 하며, 주 전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

③ 스마트시티 및 그린시티

-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재난 및 기후 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하고 본격 추진('15.9월)
 - 국립표준기술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솔루션 도출, 교통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교통시스템 개발, 혁신적인 도시망 구축 등

○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그린시티 조성 중

- 뉴욕시는 '19.4월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해 '50년까지 중대형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 추진
- LA는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Sustainable City PLAn)을 수립하여 '22년까지 그리드 고도화에 80억 달러와 녹색교통에 매년 8.6억 달러(4년간)를 투자.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40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분야 >

분야	주요 내용
친환경자동차	•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9개 주는 무공해자동차(ZEV)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채택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H2USA) 출범
재생에너지	• 전력 수요에서 풍력의 비중을 '30년 20%, '50년 35%로 확대 • 풍력,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생산을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스마트시티 및 그린시티	•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 발표 • 뉴욕시는 '50년까지 건물 배출 온실가스의 80% 감축 추진 • LA는 '22년까지 그리드 고도화(80억 달러), 녹색교통(매년 8.6억 달러) 투자,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다. 향후 전망

-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대로 정책이 이행될 경우, 향후 '35년까지 1.7조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에 투자될 전망. 일부 주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전기차 연비 관련 환경 규정을 강화하고, '30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50만 개의 친환경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
 - 풍력 생산을 장려하여 '30년까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배 확대할 계획

-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35년까지 건물의 탄소발자국 50% 감축, 건물 400만 채와 주택 200만 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관련 정책 공약 >

항목	세부 내용
감축목표	· '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0(Net Zero) 달성 · '35년까지 1.7조 달러 이상의 연방예산 투자
파리기후협정	· 재가입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인프라	· 4년간 2조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투자
에너지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석유·가스 산업에서 메탄 배출 제한 설정
운송·물류·교통	· '30년까지 신규 공공 친환경차 충전소 50만 개 건설 · 연방정부 차량은 무공해차량 구입 · 워싱턴/뉴욕,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사업 추진
건물	· '35년까지 건물의 탄소발자국 50% 감축 · 4년간 건물 400만 채와 주택 200만 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일자리	· 환경 관련 일자리 1,000만 개 창출

*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무역협상에 적극 활용하며, 자국 녹색시장 보호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시행할 전망

-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미국과 EU가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탄소배출 감축 압력을 강화할 것
-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미국이 정한 감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기후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가. 현황

□ EU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체결된 조약인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 중

-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08~'12년) 동안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5%를 감축하며 감축목표인 4.5% 초과 달성
-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0년 대비 최소 40% 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32%로 확대, 에너지 효율 목표를 32.5%로 제시

<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논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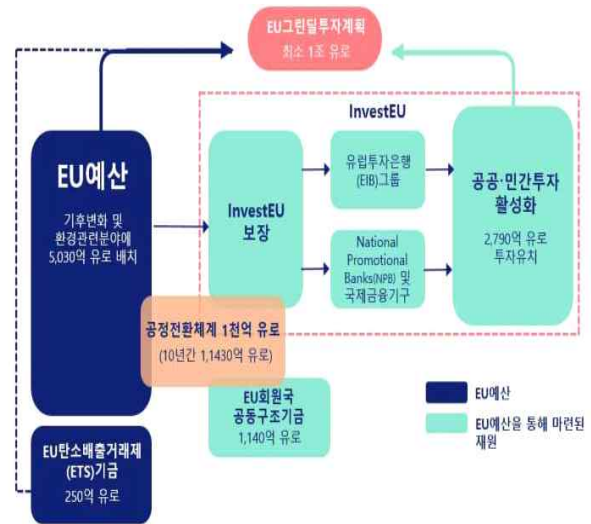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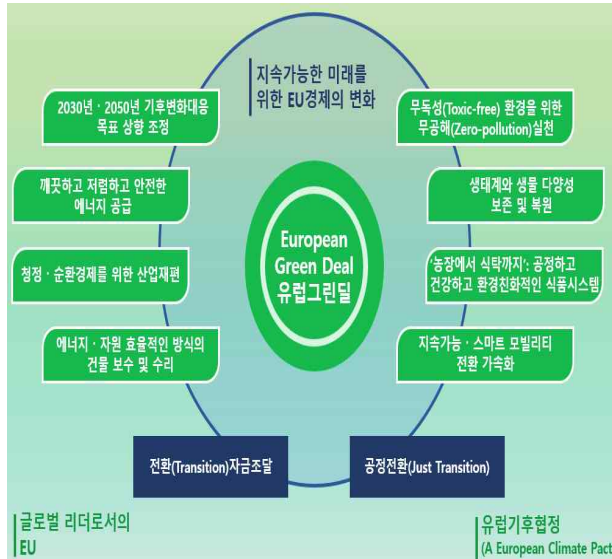
- '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UN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함.
- '97년 3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정의하였고, 1차 공약기간('08~'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
 - *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 '15년 21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파리기후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
 - 선진국에 국한되던 감축 의무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체제가 마련됨. 파리기후협정은 '16.11월 공식 발효

□ '19년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19.12.11)

- * 유럽그린딜은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위원장이 이끄는 EU 집행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팀머만(Timmermans) EU 집행위 부위원장이 기후변화 총국을 이끌며 유럽그린딜 정책을 총괄

- **(배경)** EU는 기후변화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리더로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여 국제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27개국이 유럽그린딜에 합의했으며,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
- **(계획)** 유럽그린딜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후 및 환경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켜 EU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성장전략
 -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별 정책 계획은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에너지 효율 방식의 건물 보수 및 수리 △친환경적인 식품 시스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구성
- **(목표)** EU 집행위는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 조정. '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최소 55%로 상향,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32%에서 33.7%로 증가하도록 목표 조정
- **(예산)** 정책 이행을 위해 EU 집행위는 1조 유로 이상의 유럽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수립
 - '21~'27년 EU 장기예산(1조 743억 유로) 및 긴급 위기대응 기금(7,500억 유로)을 모두 합한 비용의 30%인 5,030억 유로를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
 - 이외에도 혁신현대화 기금(Innovation and Modernization Funds)에서 250억 유로 지원
 - Invest EU에 할당된 EU 예산을 담보로 유럽투자은행 그룹과 협력하여 2,790억 유로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기후 및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EU 회원국 공동자금 구조기금(National Co-financing Structural Funds) 1,140억 유로 추가 조성

< 유럽그린딜 정책 개요와 투자 계획 >



* 자료원 : 유럽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KOTRA, 2020)

□ EU 집행위는 상향 조정된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후법 제정,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 확대, 에너지세 지침 개정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 중

- (기후법) 탄소배출 감축목표 법제화를 위해 기후법(Climate Law) 제정 추진
 - '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5년마다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법안 수정에 반영

-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 대상을 해상운송, 육상 운송, 건설 분야로 확대 적용할 예정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받은 국가나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

- EU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05년부터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11,000개 이상의 에너지 사용 시설물과 항공편 탄소 배출에 적용되고 있으며,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5%가 거래 중
- 국경을 이동하는 특성상 탄소배출권 거래제 편입은 어려워 해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항공은 유럽경제지역 내 항공편에만 적용

- (탄소국경세) EU 집행위는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탄소누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 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추진
 -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있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 규제가 약한 역외 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 등으로 발생
- EU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감축 노력으로 역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 (관세나 ETS 구매), 역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일괄 과세 부과 후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으로 환불해 주는 방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대체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에너지세 지침) 에너지세 지침*(Energy Tax Directive)은 '03년 채택 후 개정된 적이 없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재. '21년까지 동 지침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해운연료세 및 항공세 부과 추진 계획
 - * 발전·운송·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규정

나. 중점 추진분야

① 그린 모빌리티(지속가능한 운송)

- EU는 운송부문의 청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을 수립
- EU 전역의 복합운송(multi-modal connections) 활성화를 위한 범유럽 운송네트워크(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의 140개 핵심 프로젝트에 22억 유로를 지원

- (친환경차 및 충전소 보급 활성화) '25년까지 1,300만 대의 저탄소 배출 차량 보급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100만 개 설치 계획
 - * EU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을 형성. '19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 대수는 중국 350만 대, EU 182만 대, 미국 140만 대. EU 내에서 전기차 보급률 비중은 독일(6.2%), 노르웨이(5.2%), 영국(4.8%), 네덜란드(4.2%), 프랑스(3%) 순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EU 회원국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구입 인센티브 제공

< EU 주요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현황 >

국가	세제 혜택		구입 인센티브
	취득세	등록세	
오스트리아	VAT 인하, 취득세 면제	면제	5만 유로 미만 : 3,000 유로
크로아티아	물품세 면제	환경세 면제	전기차 : 9,200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4,600 유로
프랑스	면제	-	4.5만 유로 미만 : 개인 7,000 유로, 법인 5,000 유로 4.5만~6만 유로 : 개인/법인 3,000 유로 6만 유로 이상 : 개인 5,000 유로, 법인 2,500 유로
독일	VAT 인하	10년 면제	4만 유로 미만 : 전기차·수소차 9,000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6,750 유로 4만 유로 이상 : 전기차·수소차 7,500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625 유로
헝가리	면제	면제	3.2만 유로 미만 : 7,350 유로 3.2만~4.4만 유로 : 1,500 유로
이탈리아	-	5년 면제	5만 유로 미만 : 최대 6,000 유로
루마니아	-	면제	전기차 : 1만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4,250 유로 폐차비 : 1,250 유로 지원
슬로바키아	2년 감가상각	면제 (전기차)	전기차 : 8,000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5,000 유로
스페인	특별세 면제	전기차 75% 감면	전기차 : 4,000~5,000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1,900~2,600 유로
스웨덴	-	연간 도로세 인하	전기차 : 6만 SEK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1만 SEK

* 자료원 : Electric Vehicles: Tax Benefits & Purchase Incentives in the European Union(ACEA, 2020)

- (탄소배출 억제 정책 추진) 승용차 탄소배출 허용량을 기존 130g/km에서 95g/km로 낮추고 미준수 시 과징금 부과, 친환경차 생산량에 대해 탄소배출 절감목표 미달성 부분의 상쇄를 허용
- '25년까지 승용차는 '21년 대비 15% 감축, '30년 까지 37.5% 감축 의무

② 재생에너지 (풍력·수소)

- EU는 재생에너지 지침(2009/28/EC)을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20년 20%, '30년 33.7%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
 - * 新EU 재생에너지 파이낸싱 체계(New EU Renewable Energy Financing Mechanism)를 통해 회원국 상호 간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
 - ** 기업의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의 민간 참여 유도
- (풍력) 현재 북해가 EU 해상풍력의 최대 투자지역이나 발트해, 흑해 등 해역도 상당한 잠재력 보유하고 있어 해상풍력을 통해 저탄소 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 해상풍력 및 조력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해 해상에너지전략(European Offshore Renewable Energy Strategy)을 발표('20.11월). '50년까지 해상에너지 개발 투자규모를 범EU 차원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현재 12GW에서 '30년 60GW 이상, '50년 300GW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 (수소) EU 에너지시스템통합전략(EU Strategy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과 EU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을 발표('20.7월).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소 생산량 증대를 위한 규정마련, 투자유치, 수소 수요 촉진 및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
- '24년까지 EU 내 6GW 이상의 수전해 시설에서 최대 100만 톤, '30년 40GW 수전해 시설에서 최대 1,000만 톤의 청정수소 생산 목표 설정

-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공급망 확대를 위해 '24년까지 50억~90억 유로, '30년까지 260억~440억 유로 규모의 투자기금 조성 계획
- EU는 유럽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럽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유럽청정수소연맹(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출범

③ 건물 에너지 효율화

- EU 집행위가 제시한 '30년 배출 감축목표를 55% 이상 달성하기 위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에너지 소비량을 14%,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18% 감축해야 하는 상황
 - 건물은 EU 에너지 소비의 약 40%,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차지
 - EU 내 건물의 약 35%가 건설된지 50년 이상된 노후건물, 건물의 약 75%가 에너지 비효율적. 그러나 건축물의 개보수 작업 비중은 1%대로 낮은 수준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관련 법규
 - EU는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2010/31/EU) 및 에너지 효율성 지침(2012/27/EU)을 포함한 입법 체계 수립. 에너지와 비용 절약 측면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탈탄소 건물 보급에 기여
 - 건물 개조(2019/786) 및 건물 현대화(2019/1019)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 모든 공공건물은 '19.1.1일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20.1.1일부터 사실상 에너지 제로 건물*(nZEB, nearly Zero-Energy Buildings)로 건설해야 함.
 - * 에너지 성능이 매우 우수하며, 건물에 필요한 적은 양의 에너지는 주로 재생가능한 자원을 통해 조달하는 건물을 의미
 - 건설부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개보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 증진

- EU 집행위는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프로그램 실시('20.9월)
 - 탄소배출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며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건물 개조 사업으로 EU 투자 프로그램인 Invest EU를 활용해 재원을 지원할 예정
 - 향후 10년 동안 건물 개조율을 현행 1%에서 최소 2배인 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공공주택, 병원, 학교 등의 개보수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유럽 내 건물의 개보수를 현재 수준의 2배로 늘릴 계획
 - '30년까지 3,500만 채의 건물을 개조하고 건설부문에서 최대 16만 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 뿐 아니라 건물의 성능과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유럽 건축미학 육성을 위한 新유럽바우하우스(New European Bauhaus) 프로젝트도 추진('20.10월)
 - * 바우하우스는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운동으로 건축에 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
 - '22년까지 5개의 바우하우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④ 청정 및 순환 경제

- EU는 '20.4월 발표한 EU新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에서 EU 산업의 미래목표를 수립하고 기존 산업구조 재편과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제시
 - 유럽 청정 철강 전략, 지속가능한 화학 전략, 공정전환체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해상에너지 전략, 건설환경전략 등이 포함
-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과 폐기물 감축을 위한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수립

- EU 기구부터 우선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녹색 공공조달제도(GPP, Green Public Procurement) 법률 제정

< EU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분야 >

분야	주요 내용
그린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운송)	• EU는 운송부문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개발 장려 • '25년까지 저탄소배출 차량 1,300만 대 보급 및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100만 개 설치 추진 • EU 회원국별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과 구입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이용을 '30년 33.7%까지 확대 •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30년 60GW 이상, '50년 300GW로 확대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청정수소 개발('30년까지 수전해 설비 구축에 260억~440억 유로 투자)
건물 에너지 효율화	• 건물의 에너지 성능(효율성)을 향상키 위한 건축 에너지요건을 강화 •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 개조 사업(Renovation Wave)을 추진('30년까지 3,500만 채 건물 개조)
청정 및 순환 경제	• 철강, 화학, 전력 등은 물론 산업 전반의 생산공정에서 자원 사용의 효율화, 폐기물 감축 등을 추진 • 녹색공공조달제도(GPP)를 통해 녹색시장 육성

다. 향후 전망

□ EU 내 일부 회원국의 반발과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그린딜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

- 탈탄소 과도기 내 화석연료 완전 배제,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주변국뿐 만 아니라 회원국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
 - 북·중부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남·동부유럽 국가들이 따르는 구도로 회원국들의 산업 및 에너지구조, 재정 여력 등의 차이로 회원국 간 격차(green divide) 발생 예상

- 유럽의 입지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후법 제정, 新산업전략 발표,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EU 장기예산 반영 등 분야별 세부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

□ EU는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및 경쟁 관계를 이루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EU의 탄소국경세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 준수 요구와 탄소감축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가. 현황

- 독일은 EU 내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으로 EU의 유럽그린딜 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핵심 국가
 - EU 경제 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EU의 탈탄소화 및 순환경제 전환이 성공여부를 좌우
 - 연방정부는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유기적인 협력체인 기후내각(Climate Cabinet)을 구성하여 16개 주정부와 주요 정책을 논의
 - 독일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 녹색당, 사회민주당 등 모든 정치권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 인식
- '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
 - '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80~95%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50 기후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2050) 발표('16.11월)
 - 동 계획의 중간 단계로 2030 기후행동 프로그램(Climate Action Program 2030) 채택('19.9월)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60억 유로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계획
 - '21년부터 운송 및 난방 부문의 탄소가격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에너지 효율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톤)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
 - 산업계는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해야 함에 따라, 철강 등 탄소배출 집약산업의 기후 친화적 생산공정 개발을 지원

나. 중점 추진분야

① 친환경자동차

- 독일은 '30년까지 운송 관련 탄소배출량을 '90년 대비 40~42%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탄소배출 억제 정책을 동시 추진
-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활성화) '30년까지 700만~1,000만 대의 전기자동차와 10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목표로 설정
 -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4만 유로 미만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 지원 혜택(최대 9,000천 유로)은 지속 제공되며, 최초 등록하는 전기차에 대한 차량세 면제 규정은 '25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
- (탄소배출 억제 정책 추진) 자동차 탄소배출 감축 규제와 차량세 개편 예정
 - 자동차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30년까지 승용차는 '21년 대비 37.5% 감축, 소형 상용차는 31% 감축 의무
 -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세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할 예정으로, '21.1월부터 새로 등록된 차량은 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
- (수소차 개발) 독일 정부는 미래 에너지로 수소를 채택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개발에 90억 유로 규모를 투자하기로 한 국가 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20.6월)
 - 독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작해 H2 Mobility Industry Initiative 설립하여, '30년까지 수소차 180만 대, 수소차 충전소 1,000개 설치 목표

② 재생에너지 (풍력)

- 독일 정부는 '30년까지 에너지부문의 탄소배출량을 1억 7,500만~1억 8,30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
 - 석탄 화력발전소는 점차 줄여나가 늦어도 '38년 모두 폐쇄할 방침

- 독일 정부는 소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년 53.3%, '40년 5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풍력을 비중을 '30년 30%, '40년 33.8%로 높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확대할 방침
- 해상풍력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 역할을 할 전망으로 해상 풍력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북해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계획 중
 - * '19년 기준 독일은 영국에 이어 2위 해상풍력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독일 전력 생산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0.1%에서 '19년 4%로 증가

[3] 건물 에너지 효율화

- 독일 정부는 건축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년까지 연간 7,200만 톤으로 감축한다는 계획
- 인센티브 제공, 규제 조치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개선 목표
 -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 난방시스템 교체, 창문 신규 설치, 단열 지붕 및 외벽 설치 등 건물 보수비용은 '20년부터 세금 공제 대상
 - 친환경 난방시스템으로 교체 시 40%의 보조금 지급하며, '26년부터 석유 기반 중앙난방 시스템 설치를 불허할 방침

< 독일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분야 >

분야	주요 내용
친환경자동차	• '30년까지 700만~1,000만 대 전기차 및 10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목표 • 4만 유로 미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최대 9,000유로 지원 및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 민관 협력으로 H2 Mobility Industry Initiative를 발족하여, '30년까지 수소차 180만 대, 수소차 충전소 1,000개 설치 목표
재생에너지	• '30년까지 에너지부문의 탄소배출량을 1억 7,500만~1억 8,30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 석탄 화력발전소는 '38년까지 완전 폐쇄 • 소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년 53.3%, '40년 60%로 확대. (풍력 비중은 '30년 30%, '40년 33.8% 확대 계획)
건물 에너지 효율화	•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보수비용에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 친환경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시 비용 지원

다. 향후 전망

- EU 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EU의 탄소배출 감축 규모를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탄소감축 노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
 - 독일의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산업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
 - '25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소재에서부터 추진연료 전환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예상
 - * (폭스바겐) 전기차 개발 및 양산, 충전 인프라 구축에 약 330억 유로 투자 계획('19.12월)
 - (BMW) 전기차 포함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에 300억 유로 이상 투자 계획('20.3월)
 - (아우디) '25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33% 수준까지 높이고, 20종 이상의 전기차 판매 목표
 -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 개발 상용화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은 '38년으로 설정한 석탄 사용중단 시점을 '30년으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데, 폴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아직 석탄 사용중단 시점을 발표하지 않은 EU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
 - 수소를 철강, 화학 등 산업 및 도로, 항공 등 운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도할 전망

가. 현황

- 영국은 세계 최초로 '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1년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 주최국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시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수준 대비 68%까지 감축

- 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 보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초점

*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용어는 노동당,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 개선사업을 의미함.

-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청정성장전략(The Clean Growth Strategy)을 제시('17.10월), 기후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08년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개정('17.2월)
 - 동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에서 탄소 순 배출량 0으로 목표 재설정
- 영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내각 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설치('19.10월)
 -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재무부, 외교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환경부, 교통부, 주택부 장관들이 참석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도모

- 존슨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최대 25만 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 계획*(10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발표('20.11월)

* ①해상풍력 확대, ②수소경제 구축, ③원자력 확대, ④전기자동차 전환, ⑤무공해 대중교통, ⑥친환경 항공 및 해상, ⑦건물 에너지 효율화, ⑧탄소포집 기술개발, ⑨환경보호, ⑩녹색기술 및 금융 육성

- 영국 정부는 '50년까지 120억 파운드 지출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최대 25만 개의 숙련 일자리 창출을 기대
- 6개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재정 지원을 동반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추진계획은 민간 자본의 녹색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탄소포집) '20년대 중반까지 2개의 탄소포집 클러스터 설치 및 '30년까지 2개의 탄소포집 클러스터 추가(10억 파운드)
 - (청정 수소) 난방과 요리에 수소를 사용하는 시범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수소동네('23년)→수소마을('25년)→수소타운('30년) 조성(최대 5억 파운드)
 - (원자력) 대규모·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첨단 모듈 원자로 연구개발에 투자(5억 2,500만 파운드)
 - (전기차) '30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차 판매 중단,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위해 13억 파운드 투자, 전기차 제조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최대 10억 파운드 지원(총 약 30억 파운드)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규기준 주택, 공공건물의 효율성 제고(10억 파운드)
 - (친환경 해양) 청정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2천만 파운드)

나. 중점 추진분야

① 친환경자동차

- 영국은 탄소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30년부터 가솔린 및 디젤차 판매를 금지하여 전기 및 수소 신차만 구매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금지할 예정
 - *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의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크며 전기 줄을 꽂아 배터리를 충전하므로 주행거리도 긴 특징이 있음.

- (전기차 충전소 확충) 영국 정부는 전기차 급속충전 허브 설치를 위해 5억 파운드 투자 및 30마일 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20.3월)
 - 영국 정부는 주거지 도로변 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방 자치에 500만 파운드 지원하고, 충전소 인프라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4억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
- (보조금 지원) 영국 정부는 '10년부터 저탄소배출 차량 보급을 위해 5억 파운드 이상을 지원했고, '11년부터 정부에서 명시한 저탄소배출 차량 구입 시 최대 3,500파운드의 보조금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정책적으로 지원 중

2 재생에너지 (풍력)

- 영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중 해상풍력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
 - * '20.2분기 영국 전력 생산의 44.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 이 중 46%가 풍력 발전
 - '20.2분기 해상풍력 발전은 전년 대비 31% 증가, 육상풍력은 20% 증가
 - 영국 내에서 바람이 가장 많은 스코틀랜드가 풍력 발전 허브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30년까지 해상풍력 생산량을 4배로 늘려 40GW로 확대하고 최대 6만 개의 일자리 지원
- 영국은 그동안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으로 인해 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EU 탈퇴(브렉시트)로 '21년부터 영국 정부의 지원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전망
 - 영국 정부는 직접 지원 대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소·메탄 등 가스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기술(P2G, Power to Gas)을 이용하여 청정 수소연료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

③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영국 정부는 가정, 학교, 병원 건물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대 30억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20.9월)
 -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홈 보조금(Green Home Grant)에 20억 파운드와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10억 파운드를 추가로 책정
 - 정부 지원금은 벽·바닥·지붕 등의 단열, 이중·삼중 유리 설치, 저탄소 난방에 이르기까지 녹색주택 개선에 지원
- 그린홈 보조금 지원을 통해 60만 가구 이상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은 연간 최대 600 파운드 에너지 비용 절감 예상
 - 각 가정의 에너지 비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영국 전역의 지역 배관공, 건축업자, 상인 등 녹색건설 분야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지원

< 영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분야 >

분야	주요 내용
친환경자동차	• '30년부터 가솔린 및 디젤차 판매 금지, 전기차 및 수소차만 구매 가능 •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 '30년까지 해상풍력을 4배로 확대(40GW) • 청정에너지원으로 청정 수소연료 기술개발에 주력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신규 및 기존 주택과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지원(총 30억 파운드) • 60만 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지원(그린홈 보조금 제도)

다. 향후 전망

- 영국 정부는 기후 및 환경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전망
 -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대중교통 등 저탄소 운송, 저탄소 건물, 자연 복원 등

가.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대해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지지

- '17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7.2%를 차지, 이는 미국, EU, 캐나다 배출량을 모두 합한 규모
- 탄소배출 감축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며, 개도국인 중국은 감축 여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입장
- 그러나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이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음.

* EU-중국 정상회담('20.9월)에서 EU는 중국이 '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이는 중국과 공정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

□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기후대응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

-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30년까지 '05년 대비 60~65%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함.
- 높은 석탄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청정 신기술 투자**, 탄소가격 책정메커니즘을 추진

* 중국 전력 생산의 65%를 석탄이 차지할 정도로 석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19년)

** 청정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발전소의 40%가 중국에 있음. 중국은 해당 부문에 780억 달러를 투자, 이는 유럽(598억 달러)과 미국(456억 달러)을 능가('16년)

- 최근 시진핑 주석은 UN 총회 연설에서 '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20.9월)
 - * 선진국의 '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비해 10년의 차이가 있으나, '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함.
-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25년 이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할 예정

□ 중국은 여타국 탈탄소 그린뉴딜 정책과는 다른 新인프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그린뉴딜 보다 성장 지향적인 디지털뉴딜에 초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 인식에 따라, '20.3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新인프라 정책을 발표. '20.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新인프라 범위를 정보, 융합, 혁신 인프라로 확대 발표
- 5G, AI 등과 같은 첨단 분야를 통해 新에너지 및 新녹색 업종의 기반 시설을 촉진하고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20.5월, 양회)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에 향후 5년간 10조~17.5조 위안(1.4조~2.5조 달러)이 투자될 전망

< 중국이 지정한 新인프라 범위 >

7대 인프라 ('20.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新인프라 ('20.4월)		
5G 네트워크	정보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5G,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
산업인터넷			
인공지능(AI)		신기술 인프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컴퓨팅 파워 인프라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도시철도	융합 인프라	스마트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도심궤도(철도) 교통
특고압 송전 설비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특고압 송전설비, 스마트그리드
-	혁신 인프라	혁신 인프라(R&D)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 혁신 인프라

* 자료원 :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초(산업연구원, 2020)

나. 중점 추진분야

① 친환경자동차

- 중국은 전기자동차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시장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지리자동차, 동평자동차 등 기존업체, BYD, NIO 등 스타트업, 테슬라, 폭스바겐 등 외국업체 등 수백 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기업이 경쟁 중
 - *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 차지('18년)
-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를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 '25년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20%를 차지하도록 목표 설정하였으나 '19년말 25%로 상향 조정
 -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판매세 면제 혜택을 부여. '19.1월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 제도**를 시행 중
 - * '21년 철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위기극복 일환으로 '22년까지 연장
 - ** 중국에서 연간 3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량의 10%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생산하도록 의무화
- **(수소차 개발)** '16년부터 수소차 육성에도 나서며 '30년 세계 최대 수소차 시장을 지향
 - '25년까지 수소차 5만 대와 수소차 충전소 300개 확대, '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와 충전소 1,00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

②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

- 중국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 * 중국은 미국에 비해 풍력 발전용량이 2배 이상 많으며,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의 1/3 보유

- (풍력) 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약 210GW로 총 발전 설비용량 중 10.4%를 차지, 주로 화베이, 시베이 등 바람이 강한 지역에 건설. 풍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과잉 설비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경쟁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
- (태양광)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약 205GW로 총 발전 설비용량 중 10.2% 차지,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칭하이, 간쑤, 네이멍구 등 햇빛이 강한 서북부 사막 고원지역에 집중
-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中華人民共和國可再生能源法)을 승인('0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可再生能源發展“十三五”規劃)에서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년 15%, '30년 20%로 설정('16.12월)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특고압 송전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시베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력 수요가 집중된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관건으로, 新인프라 7대 사업 중 하나로 시베이와 둥베이를 잇는 특고압 송전설비 구축에 투자할 계획
 - * 시베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30%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17년)
 -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개발도 필요

③ 도시 재생 및 스마트시티

- 중국 국무원의 신형 도시화 계획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로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14년)
- 신형 스마트도시라는 새로운 사업을 통해 질적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전환('16년)
 - '20년까지 100개 시범 스마트시티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광대역통신망 보급, 도시규획 관리 정보화, 인프라 스마트화, 공공서비스 간편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

- 13.5계획에서 사람 중심의 질적 스마트시티 구축 강조('16.12월)
 - 중국 IT 3대 기업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스마트교통 분야 시범 사업에 참여
 - 향후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교통관리, 치안관리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분야 >

분야	주요 내용
친환경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을 '25년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 '25년 수소차 5만 대 및 수소차 충전소 300개, '30년 수소차 100만 대 및 충전소 1,000개 확대 목표
재생에너지	• '30년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축소(과잉 설비 문제 해소) • 시베이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의 도시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특고압 전송 및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 투자 계획
도시 재생 및 스마트시티	• 중앙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 사업 확장(사람 중심의 질적 스마트시티 구축) •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광대역 통신망 보급, 인프라 스마트화 등을 추진

다. 향후 전망

- 중국 정부는 '6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탈탄소화 정책을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
 - 세계 1위 탄소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미국·EU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중국이 저탄소 기술의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6 인도

가. 현황

-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빠르게 증가
 - '17년 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6.8%로 '92년 대비 253% 증가한 수치. 그러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8톤에 불과해 중국(7.1톤), 미국(16.2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17년)
 -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55.4%)가 높음.
 -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 '22년 G20 의장국인 인도가 신흥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
 - '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중국이 인도를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
 - 아직 그린뉴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모디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 인도는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까지 '05년 대비 33~35%로 설정
 - 모디 총리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인도의 야심찬 기후 행동계획을 발표('19.9월)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기존 '22년 175GW에서 '30년 450GW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 * 450GW는 '19년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81GW)의 5배 이상 수준

- 인도는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주목
 - 열악한 전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 태양광, 풍력 등에 글로벌 경쟁력 보유
- 늘어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및 기존 도시의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인도 전역을 5개 산업 기반지역으로 연결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인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s)과 함께 100대 스마트시티(100 Smart Cities Mission) 건설 추진 중
 - * 델리-मुंबай, 벵갈루루-मुंबай, 첸나이-벵갈루루, 비작-첸나이, 암리차르-콜카타

나. 중점 추진분야

① 친환경자동차

- 인도는 '13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인 NEMMP(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2013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NEMMP 2020 시행 중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20년까지 600만~70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해 전체 탄소배출량을 3% 감축하고 '30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비중을 신차의 30%까지 확대할 계획
 - 공무수행 차량,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 배터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량은 도로세 및 등록세를 면제
 - 전기차 생산업체와 인프라 제공업체에게 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2년까지 충전소 확충에 주력할 계획
 - '26년까지 자동차산업에서 6,5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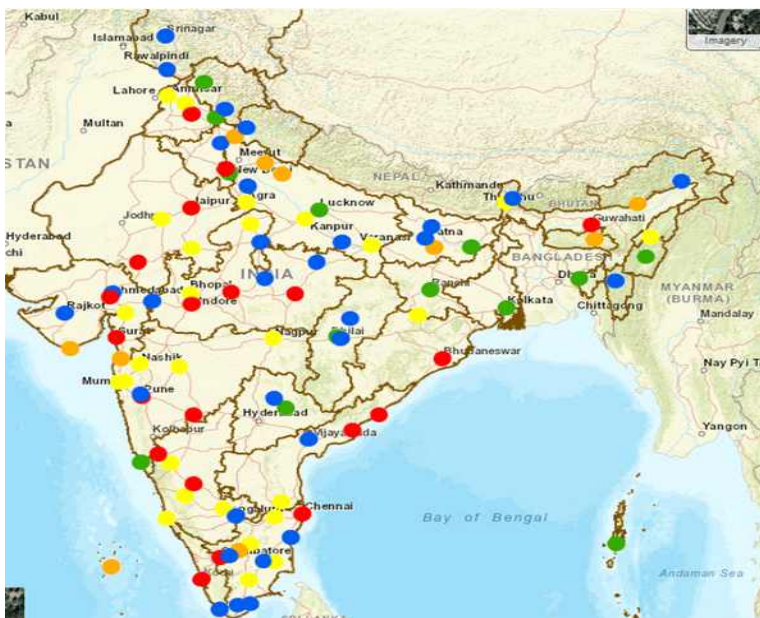
②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

- 인도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0년까지 450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 풍력-태양광 하이브리드 정책을 추진하여 단일 부지 내 풍력단지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8.5월)
 - '03년 전력법(Electricity Act) 제정을 통해 전력 생산과 배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 허용
- (풍력) 인도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세계 4위 풍력 국가로 도약하였으며, 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22년 60GW까지 끌어올릴 계획
 - '15년 육상에서의 풍부한 풍력 발전 경험을 토대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풍력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풍력정책(National Offshore Wind Energy Policy)을 발표했으며 '22년까지 발전 설비용량 5GW 달성 목표
 - 약 20여 개의 풍력 관련 제조업체가 있으며, 미국이나 EU 등에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도 다수
- * Sulzon Energy, Muppandal Wind 등
- (태양광) 국가 태양광 사업(National Solar Mission)을 출범시켜 기존 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22년 20GW에서 100GW로 상향 조정
 - '14년부터 태양광 단지 및 초대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21~'22년까지 총 40GW 규모에 해당하는 50개 이상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할 계획
 -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최대 에너지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태양광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설정
- * 현재 세계 5대 태양광 단지 중 3개가 인도(Bhadla 태양광 단지, Kurnool 태양광 단지 등)에 위치

③ 스마트시티

-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급증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00대 스마트시티(100 Smart Cities Mission) 개발 계획을 제시('14.7월)
 - 스마트시티의 기본 원칙으로 살기 좋고(Livability), 일하기 좋고(Workability),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도시로 설정
 - '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2조 500억 루피(약 33조 8천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사업 투입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수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가 부담하는 역할
- * 특수목적회사는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관리 감독, 자금조달 등을 수행하며 정부에서 임명하는 CEO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
- 선정 작업을 통해 100개의 스마트시티 대상 도시를 선정
 -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전략을 통한 ICT산업 육성 등 스마트시티를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 선정지역 >



구분	선정도시
1차 선정 (’16.1월)	20개
2차 선정 (’16.9월)	40개
3차 선정 (’17.1월)	30개
4차 선정 (’17.6월)	10개
합계	100개

* 자료원 : 인도 주택도시개발부

< 인도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분야 >

분야	주요 내용
친환경자동차	•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 확대('30년 30%) •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 감면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 확충
재생에너지	•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0년 450GW('19년 대비 5배) • 태양광 발전용량을 '22년 20GW에서 100GW로 상향 조정 • 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22년 60GW로 확대, 육상풍력 기술을 해상풍력으로 확대
스마트시티	• '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2조 500억 루피 투자)

다. 향후 전망

- 인도는 현재 여타국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과 같은 국가전략이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으로 예상
- 인도 정부는 '20년 말까지 '50년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30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UN에 제출할 예정
- 인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전기차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III

결론 및 시사점

□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위해 각국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 도입,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 친화적 혁신 기술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이행을 목표로 각국은 국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

<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요약 >

구분	미국	EU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탄소중립 목표시점	'50년	'50년	'50년	'50년	'60년	-
정책	청정에너지 혁명과 환경정의 계획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공약)	유럽그린딜 ('19.12월)	2030 기후행동 프로그램 ('19.9월)	녹색산업 혁명 ('20.11월)	新인프라 정책 ('20.3월)	-
추진체계	연방정부	EU 집행위	기후내각	기후변화 내각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부 일부 주정부
예산	1.7조 달러	1조 유로	460억 유로	120억 파운드	분야별 상이	분야별 상이
중점 추진분야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 스마트시티 및 그린시티	그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풍력·수소), 건물 에너지 효율화, 청정·순환경제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풍력),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풍력),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 도시 재생 및 스마트시티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 스마트시티

□ 주요국이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규제로서의 위기요인과 사업기회가 공존하면서 향후 각국 경기 부양책의 주요 수단이 될 전망

- (위기요인)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강화 및 확산
 - EU의 탄소국경세와 녹색공공조달제도(GPP), 미국의 그린뉴딜 사업에 바이 아메리칸 도입 등은 관련 업계에 큰 영향 미칠 전망
 - 이 외 불법 보조금 금지, 다양한 기술표준 등 녹색 무역기술장벽(TBT)도 녹색시장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 * 최근 미국은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WTO에 제안('20.12월)
- (기회요인) WTO에 따르면 기후변화 시장규모는 '30년까지 26조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코로나19 이후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가 친환경 분야에 투자됨.
 - 주요 개도국의 경우 '30년까지 그린 빌딩, 전기차, 교통 인프라, 폐기물 관리, 하수 처리, 재생에너지 등에서 23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IFC, 2020)
 - 태양광 패널 및 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 효율 건물용 건축자재, 냉난방 설비, 스마트그리드 등의 시장 확대
- WTO 등을 중심으로 녹색시장 무역자유화 논의도 진행 중
 - '16년에 중단된 환경상품 무관세화 협상(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재개 필요성
 -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LED, 스마트그리드, 대기오염 절감 장비, 폐기물 처리 관련 제품에 현재 16~50%의 높은 관세 부과 중(USTR)
 - 녹색기술(Green Technologies)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WTO에서 이미 논의 중

[끝]

작 성 자

■ 통상지원팀

이주미

Global Market Report 21-001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1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02-3460-7513)

I S B N | 979-11-6490-808-0
(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